

「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」 의견 조치계획

위원명	의견 내용	조치 계획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김천주 위원 (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통신 분야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모든 문제는 사업자나 기관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(이용자)의 편리 입장에서 해결하면 그 정책은 성공한 것임 ○ 업무계획상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- 청소년 언어순화 캠페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)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캠페인 세부내용이 보다 더 폭넓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개최 완료 - 일시 : '13. 6. 10 ~ 6. 14 - 유관기관·단체와 협력하여 선플(선한댓글) 달기 운동 개최 - TV, 라디오, 지하철,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 상영 - 인터넷 윤리 상설 체험관 개관(분당 잡월드) - 총 61개 초·중·고등학교 대상 인터넷윤리 교육 ○ (청소년 언어순화 캠페인) '13년 5월 '청소년의 달'과 10월 '한글주간이 속한 달'에 각각 지상파방송사 등을 통해 언어순화 자막고지 캠페인 전개 (5월 : 5.5~5.19 2주간 실시, 10월은 계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또한 10월 언어순화 특집프로그램을 제작·방영할 계획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순동 위원 (한국광고협회 회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고에 대해 공공성만을 강조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,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는 광고 산업의 성장이 필요함. 창조경제에 맞도록 광고정책은 규제보다는 진흥차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통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미디어렙사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년 약 20억원의 예산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에 지원하고자 관련 사업 추진 중 ○ 또한, 방송광고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광고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위원명	의견 내용	조치 계획
<p>김자혜 위원 (소비자시민모임 회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광고의 사후심의 전환 이후 소비자 피해가 많아졌는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홈쇼핑 허위 과장광고 등은 사전에 규제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○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과도한 요금제로 인해 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○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액결제 중재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노인층들이 이용하기 어려운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○ MVNO 사업자들이 가입유치를 위해 상품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전화로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보는 소비자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통위는 방송광고 관련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'14년부터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 ○ 미래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자격 확인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(미래부 소관) ○ 모바일콘텐츠 결제관련 피해 예방·구제를 위한 통합 민원창구 (앱 결제 안심터, www.appsafer.or.kr)를 운영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, 이용자 피해예방 안내서 제작 등 이용자보호 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예정 ○ MVNO 사업자들이 상품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가입자를 모집 하도록 감시·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
<p>이호경 위원 (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통위 정책중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은 많은 반면 노인에 대한 정책은 특별한 것이 없음. 고령화 사회임을 고려해 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협조하여 정책도 개발하고 캠페인 활동도 같이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○ 사회가 고령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공동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방송에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난청노인의 방송시청을 돕기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기를 보급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방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노인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음 ○ 방송 드라마나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'고령화, 핵가족화 등에 따른 공동체 가치에 관한 부분들이 훼손'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 심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음

위원명	의견 내용	조치 계획
김재윤 위원 (삼성경제연구소 전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기술부문의 이노베이션 활용방안이 방송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○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층의 변화와 시청방식의 변화에 대해 정책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○ 매체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표현방법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HD 지상파방송 등 방송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정책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○ 젊은 층이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 이동형 기기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로 TV를 많이 보는 점을 감안, 이동형기기의 TV시청점유율 조사방안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○ 방송통신심의위의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를 통하여 불법·유해 정보에 대하여 시정을 하고 있으며 포털 사업자의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
이석우 위원 (카카오 대표이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바일에서 개인정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창의적인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텐데,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해외에 비해 심해 경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음. - 규제할 것은 해야겠지만 방통위가 풀어줄 것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여론을 선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정책 수립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음 - 이를 위해 방통위는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, - 위치정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·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임
오택림 위원 (법무법인 세종 변호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개발할 때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규제 등과 관련해 방통위가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줄 수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LBS(위치기반서비스) 비즈니스 지원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, 교육 등을 제공 중에 있으며, - 향후 새로운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

위원명	의견 내용	조치 계획
변광윤 위원 (이베이크리아 대표이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때문에 해외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, 규제도 필요하지만 산업발전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○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가 자주 바뀌어 왔는데, 사업자마다 규모가 다르고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정책 수립 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음 ○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신규 제도 수립시에는 별도의 제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바 있음 -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도 병행하도록 하겠음
윤석민 위원 (서울대 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디어정책을 정하는데 정치권, 사업자, 방통위 등이 있지만, 제대로 된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책무는 방통위에 있음. 수신료, 종편 재승인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정치권 등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정교한 정책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신료, 종편 재승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김국진 위원 (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콘텐츠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- 유럽의 경우 매출액의 1/3을 콘텐츠에 투자하는 반면 KBS는 21%정도 투자하는 수준임. 정부가 콘텐츠 투자를 위해 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을 달리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○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정책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재허가시 방통위가 정한 비율이상으로 제작비를 투자하도록 조건으로 부과(KBS 지역국 3%, 지역MBC 10%, 지역민방 14%) - 2013년도 재허가시에도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필요시 조건 등을 부과할 계획임 ○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서비스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서비스 단계별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

위원명	의견 내용	조치 계획
<p>강정화 위원 (한국소비자연맹 회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흉악범죄 보도 등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, 방송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○ 인터넷 매체의 광고문제는 거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○ 개인정보보호는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가 상당히 낮은 정도여서 법원판결에서 대부분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수준임. 현재 사업자의 의무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간의 의무의 정도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○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본인만이 포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인터넷과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도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고, 방송심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음 ○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차단 중에 있음 ○ 현재, 사업자의 규모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양에 따라 망분리, 이용내역 통지 의무 등 개인정보 규제시 차등을 두고 있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할 계획임 ○ 현재도 주요 포털사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우편, 팩스 등을 통하여 대리 신고가 가능함
<p>유해영 위원 (단국대 교수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창조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. 특히 콘텐츠가 규제와 진흥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○ 콘텐츠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웹하드 운영사에 대한 벌금이 적어 이윤이 더 큰 것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,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○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해 웹하드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

위원명	의견 내용	조치 계획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업체는 중소기업체로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므로 방송사가 글로벌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&D등에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업할 필요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통위는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확대 등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유통을 지원하고 있고, 방송사업자 신규 편성실태 분석 등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편성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('13.12월) * 다만 R&D기금 등에 대해 필요시 미래부와 협의할 예정임
변승일 위원 (한국농아인 협회 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부분 청각 장애인은 스마트TV를 구입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TV로도 수화통역 방송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 ○ 자막방송의 경우 오·탈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은 전체적인 내용에 혼란을 겪게 되는데, 자막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각장애인 및 일반 시청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화방송서비스 개선사업*을 추진할 예정('14년 예산 13억원 요청) * 모든 TV수신기에서 시청자가 리모콘을 이용하여 수화화면 제거 또는 크기조정을 할 수 있는 신유형의 '스마트TV기반 수화방송서비스'로 개선 ○ 자막방송 뿐만 아니라 수화·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
서병호 위원 (TNmS 명예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좋은 공익광고를 방송사가 방송하지 않으면 제작비만 낭비하게 됨으로 공익광고 방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, 이러한 의무를 재허가 심사 시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사업자별로 월간 방송시간 중 일정 비율(지상파사업자: 0.2%, 기타사업자: 0.05%)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○ 지상파방송 재허가심사시 공익광고 실적을 일부 평가하고 있으며, 향후 공익광고 편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